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 ▶ 말하다 ▶▶

잊지 않고 방문 신청에 계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II ▶ 말하다 ▶▶

인 구 보 상 금 에 대 한 권 리



잊지 않고 싶은 당신과 함께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부터 언론까지 온 사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무색하게도 재난은 반복되었고, 각 재난의 양상이 다르지만 재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고통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재난은 불운한 사고나 불행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문제가 맞물리고 중첩되었을 때 사고는 재난이 되며, 이 과정에는 국가를 비롯한 여러 행위 주체들의 책임이 개입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는 재난을 ‘개인의 불행한 서사’로만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재난 피해자가 하는 말은 단순히 불운을 한탄하는 소리로만 취급되며, 피해자를 안타까워할 뿐 피해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난은 개인의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재난이 개인의 문제가 될 때 재난의 책임은 사회가 아닌 개인의 탓으로 돌려지며, 피해자는 관련된 정보나 참여에서 배제됩니다. 필요한 지원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재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의 반복은 재난의 반복과도 맞닿아있습니다. 피해자의 참여가 배제된 진상 조사는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결과를 낳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기 십상이었고, 이는 비슷한 재난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비방과 비난은 재난의 연속이자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일은 재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뿐 아니라 재난의 반복을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재난이 사회적 사건이라면, 재난 이후의 과정은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재난이라는 익숙한 슬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부터 고민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은 그 시작으로 지난 2019년 4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재난 피해자들이 겪은 시간을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로부터 권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더 널리 나누기 위해서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를 발간합니다.

이 핸드북에서는 ‘재난’과 ‘피해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각 단어들은 너무나 많은 뜻을 담고 있기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수가 적으면 재난이 아닌가? 자연재해와 인재는 서로 다른 재난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가? 핸드북에서는 ‘재난’과 ‘피해자’에 따라오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답하거나 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재난과 재난이 아닌 것’,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서로 구분하기보다 이 개념들이 더욱 확장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어떤 사건이 재난인지”, “어떤 사람이 피해자인지”를 규명하려 노력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북에서 이야기하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가 조금씩이나마 확인되고 확장되어온 역사는, 곧 재난 피해자가 싸워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재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이 사회가 안전해지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재난 피해자가 바뀐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싸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싸워나갈지 고민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잊지 않고 싶은 당신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2019. 12. 1.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03	펴내며 잊지 않고 싶은 당신과 함께	28	Part 2. 변화를 위한 싸움
08	워크노트 1. 내가 떠올리는 '재난'과 '피해자'	30	Q1.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10	Part 1. '그런가 보다' 했던 말	32	함께 생각하기 언론은 어떻게 재난과 피해자를 재현하는가?
12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다니.”	34	Q2. 재난 피해자가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가요?
13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	36	Q3. 진상규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4	함께 생각하기 재난의 풍경	38	Q4. 공식적인 사과는 왜 중요한가요?
15	“어쩌다 그렇게 위험한 곳을 갔을까.”	40	Q5. 책임자들은 이미 처벌받은 게 아니었나요?
16	“그래도 나라에서 할 만큼 했겠지.”	42	Q6. 왜 국가가 배상해야 하나요?
18	함께 생각하기 재난과 불평등	44	Q7. 피해자에게 재발방지 대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19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이고 의인입니다.”	46	Q8.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20	함께 생각하기 안전할 권리는 모두의 것	48	Q9.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21	“저런 일을 당하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플까.”	50	함께 생각하기 무관심 속에 방치된 추모 공간, 이대로 괜찮을까?
22	“그래도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52	워크노트 3. 진실, 정의, 안전, 회복, 기억의 현재
23	함께 생각하기 '가족'에게 한정되지 않는 피해자의 권리	55	나가며 재난 피해자의 곁을 지킬 우리 모두를 위해
24	“저 분들에 비하면 나 힘든 건 아무 것도 아니지.”	58	부록 읽어보면 좋을 책들
25	“괜히 말 걸었다가 더 힘들어하시면 어떡하지?”	62	부록 재난 피해자의 권리 목록
26	워크노트 2. 다시 들려온 이야기	64	노란리본인권모임은

1. '재난'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나요? 어떤 느낌을 받고, 무슨 단어가 연상되나요? 아래에 단어나 문장을 자유롭게 채워주세요.

재난

2. 재난 피해자를 둘러싼 수많은 말들을 기억하시나요? 재난 피해자가 직접 했던 말, 재난 피해자를 향해 던져졌던 말 중 기억에 남은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재난과 피해자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을 받고, 무엇이 생각나는지 적어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파트 1에서는 재난과 피해자를 둘러싼 익숙한 통념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적은 이야기를 기억하며 읽어주세요.

‘그런가 보다’ 했던 말



‘재난’이나 ‘피해자’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재난을 사회적 문제로,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 경험이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재난이 사회에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통념이 우리가 한발 더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건 아닐까요? 잊지 않기 위해, 더 깊이 공감하고 연대하기 위해 하나씩 짚어봅니다.

II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다니.”

재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비슷한 유형의 재난일 지라도 그 피해는 규모나 형태, 영향력 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큰 사건만을 재난으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의 규모가 큰 재난을 설명할 때 관성적으로 희생자의 숫자를 수식으로 사용해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재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규모나 숫자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규모가 어땠든 재난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고통이 따릅니다. 또한 아무리 규모가 작은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 부정의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재난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존엄과 생명이 숫자로 계산될 수 없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재난의 규모에 집중할 때 더 규모가 작은 재난의 고통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워진 이야기들로부터 또 다른 재난이 시작됩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기억은 재난 피해의 규모와 비례할 수 없습니다. 재난을 기억할 때 규모를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그 재난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존엄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II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

모든 재난은 예측 불가능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그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윤 추구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천재지변도 자연적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난을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속성만으로 규정한다면, ‘하늘도 무심하지’라는 관용구처럼 재난의 책임을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야 합니다.

2011년 춘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날부터 내린 집중호우 때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곧장 산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고, 산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산 중턱에 있던 군부대가 땅을 많이 파헤친 탓에 산의 지반이 약해졌고,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춘천시는 이를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중호우라는 위험 요소는 산사태와 인명 피해라는 재난으로 발전했습니다.

국가는 일상 속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재난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저버린 국가가 일상의 위험 요소를 재난으로 만듭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국가는 재난을 방지할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난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태풍, 폭우, 산사태,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이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폭염과 초미세먼지와 같은 새로운 환경 문제가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형적인 재난의 모습을 가지지 않아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 신종 플루,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같은 질병은 불시에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동시에 발생하기보다 확산력을 가지며 번져갑니다. 국가가 방역 체계와 보건의로 체계를 갖추지 않고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할 때 이는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은 노동현장에서도 일어납니다. 현대사회의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는 동시에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가 심화되면서 재난이 발생합니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거대하고 구조적인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재난의 속성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기업의 비용절감이라는 목표와 거래되고, 기업에게 노동현장의 사고 책임을 묻는 일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상품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에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암에 걸리는 노동자의 문제나, 가슴기 살균제를 구매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심각한 폐 기능 손상을 입은 소비자의 문제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국가와 자본이 만들어낸 재난입니다.

국가는 끊임없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재난의 책임을 조금 더 조심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탓으로,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개인의 부주의나 악의 탓으로 돌리는 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의 부주의한 행위나 실수가 곧 재난이 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안전’한 상태는 개인이 매사에 ‘조심’해서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이 날아와 큰 화재가 나고 한 외국인 노동자가 조사를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풍등에 붙은 작은 불씨는 대형 저유시설을 폭발시킬 만 큼의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인화 물질이 작은 불씨에도 폭발할 수 있도록 부실하게 관리했던 시설이 만든 재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풍등을 날린 개인이 아니라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한송유관공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난의 책임을 개인화하는 일은 위험을 예측하고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 나아가 재난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을 최선을 다해 구조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감추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국가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마땅히 알아야 할 위험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국가가 구성원의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재난을 개인화하려는 힘에 맞서 국가의 책임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II “그래도 나라에서 할 만큼 했겠지.”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재난에 따른 인명 피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며, 재난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 일은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되곤 합니다. 소방서나 경찰서 등 국가 기관이 어렵히 알아서 잘 하리라 짐작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험 요소가 재난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재난을 막을 의무는 국가에게 있습니다. 재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예방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재난 이후 대응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더욱 분명합니다. 국가는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 구할 당연한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는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만, 그 조치가 항상 효과적이지만은 않으며 오히려 재난을 더욱 확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발견되었던 초기에 국가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부에서 발병 병원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사이 바이러스는 확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의 대응은 감염인 격리 일변도에 그쳤으며, 정작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 노동자에게는 어떤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재난으로 발전했습니다.

국가의 재난 대응 의무는 ‘무엇이라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또한 국가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100명 중 99명을 구했으니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1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의 재난 대응 의무입니다. 특히 재난 구조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할 만큼 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

나라,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구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몰랐다가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뒤에 가려질 수 없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구해내기까지, 국가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모든 사람’을 살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산불이 번져나가던 당시 긴급 방송을 진행하던 공중파 3사 중 어느 곳에서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안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의 경우에도 재난 상황에서 배제를 경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와도 이해할 수 없다면,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피를 한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2017년 창원에 위치한 재난 대피소 315곳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곳은 41%에 그쳤으며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한 외국인 유가족은 참사 이후 수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외부와 단절되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현장, 재난에서 대피하는 과정은 물론 재난 이후에도 다양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과 대응 과정은 혼란스럽고 긴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살아남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 상황과 대피 요령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대피 과정에서 빠르게 거동하기 힘든 장애인·노인·유아동의 살아남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피한 사람들 모두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제반 시설이 필요한지, 국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은 교사와 승무원, 구조와 수습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민간잠수사들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위험한 재난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물리적인 피해를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하는 행위는 그에 합당한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감사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타인이 처한 위험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개개인들의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한 곳이 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언론이 개인의 ‘살신성인’, ‘희생’, ‘헌신’, ‘봉사’를 강조할 때 우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영웅에 의존하는 사회는 그만큼 안전에 취약한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을 통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간 것일 뿐, 제가 애국자나 영웅은 아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의 말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남기고 새겨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활동을 기억하는 방법은 누구도 영웅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난이 닥치더라도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난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할 권리를 더 많이 외칠 때 사회의 역량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에 불난 통로만 뚫어줬어도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부상자들은 모두 소방지휘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관들의 건물 진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진상조사를 유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유가족들은 ‘소방관이 더 희생해야 한다는 거냐’는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구조하는 사람과 구조를 원하는 사람의 안전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야말로 구조하는 사람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를 가장 크게 바랍니다. 구조하는 사람이 안전할 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재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조하는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구조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할 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가에 있습니다. 구조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재난 자체가 아닙니다. 불충분한 정보, 부적절한 지휘, 부실한 장비 같은 것들이 구조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취합과 공유, 재난 대처에 필요한 인력의 동원과 배치,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휘와 명령, 구조하는 사람과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비 등이 모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구조를 원하는 사람과 구조하는 사람의 안전할 권리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수록 우리 모두 더욱 안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은 저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입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많은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시신이나 유품이 존중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다시 오열해야 했고, 춘천 산사태 참사 당시 한 생존자는 자신도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시신의 진흙을 닦아가며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받으며 깊은 고통에 빠져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곁에 서고자 할 때 슬픔에 안타까워하며 공감하는 태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재난 피해자의 슬픔을 온전히 듣고 있을까요? ‘슬퍼하는 피해자의 이미지’만 피상적으로 떠올리다 보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고통을 귀담아들을 수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으면 ‘괜찮아졌다 보다’ 해버리고, 슬퍼하고 있으면 ‘뒤에서 마음을 추스르시라’ 조언하게 되기도 합니다.

‘슬퍼하는 피해자의 이미지’만으로 관계는 시작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타자화할 때 피해자는 다시 한번 고통 속에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함께 슬퍼할 사람은 없어지고 피해자의 슬픔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만 남아버립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선의와 배려가 오히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거나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인 피해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입체적인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우리는 피해자가 ‘얼마나’ 슬플지를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슬픈지를 물으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어떻게 재난을 겪는지 묻고 들을 때, 피해자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II “그래도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우리는 흔히 재난 피해자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떠올리지만, 재난의 피해는 단지 생명을 잃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쉽게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생존자,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일상에서 ‘불’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생존자 모두 재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월호에서 단원과 친구들을 떠나보낸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생존자 가족은 불안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특히 재난의 규모가 클수록 각기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은 ‘피해의 위계’ 속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시신을 찾은 희생자 가족들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말하게 되고, 생존자는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죄스럽다는 자책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론 피해자들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위로하는 마음에서 건네진 말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 깊은 고립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들이 놓인 각자의 고통을 충분히 듣고 헤아리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을 먼저 이야기할 때,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권리’로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회복할 권리, 국가에 진상규명과 지원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재난 피해자의 자격을 묻고 고통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저마다 이야기하는 상실과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어서 말할 수 없는 사회보다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고통에 비례해 권리를 승인하는 사회가 아니라 고유한 존엄을 위해 권리를 함께 외칠 수 있는 사회를 향해서요.

▶ 함께 생각하기 ‘가족’에 한정되지 않는 피해자의 권리

다큐멘터리 <불온한 당신>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커밍아웃을 하고 결혼식을 올린 레즈비언 커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족으로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구조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 못했고, 생존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커밍아웃을 선택합니다. 법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가족 관계이지만, 자신들의 관계를 주변에서 알고 있다면 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서로에게 연락이 가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성소수자 가족, 동거 가족 등 친밀함과 돌봄을 나누는 다른 관계들은 ‘가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법적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사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에 기반한 대응과 조치는 바로 그 권리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는 일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라고 부르는 연고자 집단에는 혈연가족이 아닌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때, 평등의 가치 위에서 피해자의 권리 역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을 중심으로 한정해서 재난 피해자를 떠올릴 때 놓치게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태안 해병대캠핑과 춘천 산사태로 인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던 친구와 동료들을 잃은 학생과 교사는 재난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을까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삶에서 소중한 관계는 가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가르는 위계가 아니라 함께 연대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면,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또한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II “저 분들에 비하면 나 힘든 건 아무 것도 아니지.”

우리는 종종 재난의 목격자로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실체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느낍니다. 반복되는 재난과 지난한 대응을 보며 화가 나고 우울하고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에 재난 피해자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재난을 목격한 사람들, 자신이 재난/피해자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아프지 않은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고통을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자 동료로서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면서 재난을 공동의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요? 피해 당사자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일은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혹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죄책감만으로는 안전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긴 시간을 함께 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더 드러낼 때 다른 재난의 목격자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더 쉽게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럴 때 재난 피해자들 역시 외롭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I “괜히 말 걸었다가 더 힘들어하시면 어떡하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 걸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그저 짐작할 뿐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담되고, 내가 괜히 고통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재난 피해자와 관계 맺기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예를 갖춰 대화할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에 차라리 관혼상제 예법처럼 매뉴얼이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물론 무례하거나 배려 없는 말 걸기로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관계의 매뉴얼을 바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만들어어나가는 데 매뉴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재난을 경험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할 때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야 하지만, 그저 조심하고만 있으면 관계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지를 걱정하며 정작 아무도, 아무 말도 건네지 않을 때 피해자는 그 누구와도 자신의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을 때, 피해자는 그 사람들에게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은 모임들은 이후 진상 규명의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만났고 그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대할 때 어렵거나 조심스러운 마음은 결국 피해자와 더 잘 관계 맺고 싶은 바람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한 관계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나 어긋남을 알아채고 다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이 아닐까요. 어떤 관계에도 정답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며 피해자의 슬픔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 피해자와 관계 맺기는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재난과 재난 피해자를 둘러싼, ‘그런가 보다’ 했던 이야기들을 돌아봤습니다. 덩불과도 같은 통념을 헤쳐 나온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앞서 워크노트 1에 적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해봅시다.

1.
“재난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 였는데,
지금은 [] 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2.
“파트 1을 읽는 동안 재난 피해자가
[] 라고 했던 말이
새로 떠올랐어요.
왜냐면 [] 때문입니다.”

3.
“피해자가 []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 라고 생각합니다.”

4.
“재난 피해자에게 던져진
[] 라는 말에,
이제는 []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를 위한 싸움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귀를 닫을 때에도 재난 피해자들은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해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면 피해자들의 투쟁은 조금 덜 외롭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찾는만큼 변화는 조금 더 이르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진실, 정의, 안전, 회복, 기억에 대한 권리를 다룹니다. 이 권리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거래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재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은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 들거나 피해자 모임의 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이고 집단화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험한 불행의 문제로 개별화, 파편화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축소되면 될수록 자신들이 저야할 책임의 몫 또한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당국은 희생자의 시신을 광주 12개 병원으로 분산했습니다. 큰 병원 한 곳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에도, 유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단체로 발전할까봐 이를 막으려 고의적으로 분산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에선 어땠나요? 참사가 일어난 당일부턴 정부가 경찰과 기무사를 동원해 유가족의 동향을 일일이 감시한 일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집단화되고 공론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재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많이 변화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임과 말할 권리에 대한 정부의 무시와 회피는 여전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희생자 가족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돌아온 순간 정부가 우리의 손을 탁 놓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가족들이 모임 장소 섭외를 부탁했지만, 정부로부터는 ‘개인적인 일이라 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피해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재난에 얽힌 진실을 축소하려는 여러 사회적 과정에 맞서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해결 주체를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에게 맡긴 채 시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실과 정의,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말하고 행동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진실과 정의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향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모이는 과정은 재난에 대한 개개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해석이 만나고 충돌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재난을 ‘우리’가 공동으로 맞닥뜨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행동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무수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종종 피해자의 고통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재난의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희생자의 안타까운 비운, 생존자가 겪은 남모를 사연, 실종자의 애타는 사정 등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소재들로 보도가 반복되면서 재난은 드라마처럼 극화됩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재난의 원인 혹은 재난 수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이 마치 피해자들의 행동, 나이, 사생활, 개인사, 정치적 성향 등 피해자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 씨랜드 화재에서는 “아이들이 모기향을 건드렸다”는 보도가 있었고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호프집 출입을 문제 삼으면서 재난의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세월호참사에서는 보상금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부풀려지면서 유가족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의 이러한 재난보도는 재난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을 피해자 개인에게 돌림으로써, 재난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소재로부터 사회의 관심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언론이 동정받아 마땅한 순수한 피해자인지 여부로 사회의 관심을 돌리고 유가족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행동의 불법성에 촌각을 곤두세울 때, 피해자의 모이고 말할 권리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듦으로써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가 모두 지워지고, 결국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와 같은 공동체의 과제도 유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재난을 간접적

으로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재난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가 재난을 기억하는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재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의 형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난의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언론 또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그 시작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재난의 진실을 보도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 Q2. 재난 피해자가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가요?



진상규명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것을 전문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조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거나 당사자가 진상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진상규명이 흐지부지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재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 기업, 지자체 등이 진실을 찾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월호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정부와 언론의 방해 때문에 어떻게 좌초하게 됐는지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 재난의 경험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진상규명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재난의 진실들이 피해자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행동 속에서 밝혀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1년 춘천 산사태 당시 재난의 진실을 밝힌 이들은 정부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춘천시가 약속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춘천시장의 방해로 2차례 회의만 하고 해산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산사태의 원인을 찾아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조사 끝에 군부대가 방공포 진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았기에 비가 고여 산사태를 야기했다는 점, 지자체가 산사태 위험 지역에 민박집 운영 허가를 내린 점, 대피경보가 외지에서 봉사활동을 왔던 대학생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강원도, 춘천시 모두 산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원인의 제공자였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배제된 진상조사는 진상규명의 과정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재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품고, 가장 나중까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재난의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가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겠지요. 우리는 피해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근거 없는 의혹이나 전문적이지 못한 의견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진실의 열쇠로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끊임없이 응답함으로써 재난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객관적 사실들을 수집하고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두고 진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실이란 항상 어떤 '관계'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진실을 공유하는 공동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며, 재난에 대한 어떤 해석을 공동체의 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상규명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것은 재난의 진실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과정의 출발점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국제인권기구들이 피해자의 핵심적인 권리로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와 제도에 대한 피해자의 의미 있는 참여'를 꼽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989년 4월 15일, 화창한 하늘 아래 5만4천 명의 사람들이 영국 힐스버러 축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시작되자마자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혼잡한 출입구에서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고 수천 명이 정신적 외상을 입은 힐스버러 참사입니다.

정부와 법원은 축구 팬들의 음주와 폭력으로 책임을 몰아갔고 언론은 허위 주장을 전파했습니다. 참사 이틀 후 조사위원회가 꾸러졌지만 고작 ‘입석 관중석 폐지’라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종 보고서 발표 후에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있을까요?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온도차가 생깁니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계속 요구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은 희미해집니다. 때로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여기며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유가족이 원하는 진실이 따로 있는 건가?’ 조심스레 묻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상규명 투쟁은 외로운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의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는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기향불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기향불이 건물 전체를 태울 때까지 아이들이 자다가 나오지 못한 것일까요? 다음 해 씨랜드 화재 희생자 유족회는 백서를 발간해 여러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더 이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할 만큼 해결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발화 원인에 쏠립니다. 그러나 발화 원인은 죽음의 이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라도 탈출하지 못해서, 소방차가 오지 않아서, 연기에 질식사해서 등 누군가 다치거나 죽게 되는 이유는 모두 다릅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누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진실, 사건의 구체적 상황, 그리고 누가 사건에 참여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유엔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의 한 세계가 어떻게 소멸했는지 진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 “국민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담은 <영국 힐스버러 독립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옵니다. 2016년에는 법원이 ‘경찰의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팬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판결합니다. 무려 27년 만에 유가족들의 외로운 투쟁이 진실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진실에는 시효가 없으며 피해자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문과 질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회라면 진실에 조금 더 빨리 닿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 언제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지 묻기보다 피해자가 품은 질문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보면 어떨까요? 피해자들의 투쟁에 기대어 우리 사회가 알게 된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요.



대한민국 재난의 역사에서 사과는 행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공허한 사과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자주 보아온 사과는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너무 빨리 이뤄지기도 하고, 책임의 무게가 두려운 나머지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이뤄지기도 합니다.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사과를 거부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사과하면서 책임은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직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사과와 위로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으나, 그 후 이어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탄압했습니다. 반면 용산참사 10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1월, 민감룡 경찰청장은 “적절한 시기를 봐서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이후 10년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경찰의 사과는 또 다시 유보되었습니다. 너무 빠른 사과와 너무 느린 사과, 어느 쪽도 피해자에게 가닿지 못했습니다.

폐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가슴기 살균제를 제조했던 SK케미칼과 애경 산업은 사건이 공론화된 지 8년 만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말해 조건부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 삼풍그룹 회장은 ‘자신들의 재산도 망가졌다’고 말해 대중들의 많은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말로는 사과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부정하는 경우와 아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모두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깊은 반성이 없는 사과는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재난으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자, 재난이 발생시킨 부정의에 대한 사회적 감각을 일깨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어떤 정치·사회적 모면하거나 뛰어넘기 위한 절차나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한 책임자의 공식 사과는 그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기억을 만듭니다. 전 사회적으로 세대를 걸쳐,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는 과정으로서 교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98년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일어난 열차사고에 대해 15년 만에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보상과 함께 독일 철도의 공식적인 사과도 다시 이뤄졌습니다. 과거사에 관한 한국의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경찰이 국가폭력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반성하며 사과했고, 2019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시대적 의미를 담아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과는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 재난이 일어난 지금과 달라진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는 재발방지를 위한 첫걸음이며, 공식 사과 후에는 재난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와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재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언제나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자가 이미 재판을 받았는데도 계속 책임자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 이후에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재난 발생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을 외칩니다. 책임자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요소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각 영향의 책임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 지닌 책임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반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참사의 경우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명장뿐이며, 그에 대한 명령권자나 상급 기관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소방청의 구조 미흡에 대해서 같은 국가 기관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재난 책임자 처벌은 ‘꼬리 자르기’와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습니다.

재난 책임자 처벌이 꼬리 자르기에 그칠 때, 재난 이후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책임을 가졌는지 밝혀내야 하며, 이는 결국 재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난을 막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재난에 대응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재난에서 사람들을 구해낼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각 책임의 구체적 내용과 역할

까지 상세하게 밝혀졌을 때 비로소 재난 책임자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현행 법제도가 현장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현행법을 넘어서는 재난의 구체적 책임을 묻기 위한 사회적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과정은 재난의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자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재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는 사회적 관심에 비례해서 책임자 처벌을 향한 동력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때 재난은 절대로 종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도 책임자 처벌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재난을 기억하며 끈질기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난이 벌어졌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춘천 산사태 유가족들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유가족들도 ‘결국 돈 문제 아니냐’는 비난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2015년에는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배상금 액수를 선전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도적 권리가 아니라 특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재난의 책임주체가 저야 합니다. 그런데 재난의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중첩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자들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싸우면서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가의 배상은 바로 재난의 원인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방치하고 묵인한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 혹은 공백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춘천 산사태 유가족들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500원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11년 발생한 춘천 산사태는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봉사활동을 나갔던 인하대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경보가 민박에 묵었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공유되지도, 적절한 대피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투쟁과 서명운동을 통해서 강원도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위로

금 지급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했고, 유가족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책임의 당사자인 춘천시장은 진상규명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시장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위협을 한다는 말로 모멸감을 줄 뿐이었습니다. 피해자 1인당 500원, 총 8,500원의 손배해상 청구소송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산림청의 경고에 따라 춘천시가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을 통해 재난을 접하는 우리들은 국가의 책임이 쉽게 입증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과정은 배상받을 정당한 권리를 외치며 국가의 책임을 끈질기게 물어온 피해자들을 통해 이루어져왔습니다. 2019년 1월 세월호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비단 희생자와 실종자·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의 발표와 과도한 홍보가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중요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배상이 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과 절차로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국가 배상이 사회적 비난과 인신공격의 근거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로 이해될 때, 그 권리의 실현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연결고리로 인식될 때,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조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들은 사회적 부정의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재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재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난 피해자들이 반복되는 재난을 보며 자신들의 피해가 무가치해지는 고통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부당한 피해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야 한다”는 말 속에는 재난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재난 이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정부는 도시철도 계획에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도입된 전동차는 모두 불연내장재를 사용합니다. 비상시 승객이 기관사와 사령실에 전동차 내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전 차량에 핸드 마이크식 비상 인터폰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까지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 개폐 장치도 의무적으로 갖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 설비를 갖추야 하고 방염 커튼·카펫·벽지 등의 사용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인력 기준으로는 요양병원 내 안전 목적의 당직 근무 의사를 최소 2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존재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며 싸워왔던

재난 피해자들이 있었기에 각종 안전시설과 제도, 조례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재발방지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재난의 반복을 막는 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억과 추모를 위한 길과도 연결됩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는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회복은 흔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난 피해자들이 마치 재난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이전과 이후로 삶이 나뉘어졌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빈자리와 상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은 사라지거나 다른 무언가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피해자의 회복은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재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길 힘을 얻어가는 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상실과 고통을 씻은 듯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실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응이 끝난다고 해서 재난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 이후의 사회를 살아가는 피해자들은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위치를 찾고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다시 구축될 때, 재난 피해자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회복이 사회적 회복과 맞닿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간을 버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지원은 다양합니다. 의료적,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난 피해자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종종 자신들의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의 고통이 재난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에 둔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계속해서 '피해자'라는 틀 속에 가두어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피해자마다 지원이 필요한 기간도 다릅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원 기간을 임의적으로 매우 짧게 정해놓는다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의 지속과 중단을 결정하곤 합니다. 만일 피해자의 회복이 사회적 과정이고 국가에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면, 피해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만큼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지원 시스템에 편안하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알려져야 합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 Q9.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잊지 않겠다는 약속 뒤편에 이미 희미해진 과거의 재난들이 있습니다. 1970년 남영호 침몰 참사의 유가족들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 대가 끝나면 남영호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지 않을까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참사에 대한 기록물이 거의 남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주요 재난 20건 중 그나마 인정할 만한 수준의 공공 기관 백서가 발간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합니다. 슬한 죽음이 제대로 기록조차 되지 않는 동안 엇비슷한 참사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재난의 연대기 위에서 기억과 망각은 줄곧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망각이 더 자주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재난을 잊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이 사회적 부정의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비슷한 재난의 반복을 방지하는 국가의 무능에 분노하며,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나가고 싶은 우리는 어떻게 재난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노력에 더해 사회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그 때, 그 장소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공동의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식적인 조사 기록에서 대중적인 출판물까지, 재난은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장소를 갖추고 의식을 가지는 것 역시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특히나 추모 공간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매개로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지만, 한국에서는 “땅값 떨어진 다”는 힐난마저 들으며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은 1998년 ‘에셰대역 열차사고’로 101명의 목숨을 잃은 뒤, 참사를 잊지 않고자 열차에 탄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에셰대역 앞에 추모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희생자들의 위령탑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팔공산 자락에 안전상징조형물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그간 우리 사회는 기억 대신 외면을 선택해왔던 건 아닐까 싶어집니다. 더 강하게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은 참사에 대응하는 사회의 역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 함께 생각하기 **무관심 속에 방치된 추모 공간,
이대로 괜찮을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건물 붕괴라고 불립니다.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참사 부지에 들어선 것은 기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세운 거대한 주상복합아파트였습니다. 추모 공간은 재난의 역사성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지만, 한국사회는 이 영역에 있어서 오랜 세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재난의 추모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양재 시민의 숲에 세워진 삼풍백화점 추모비처럼 현장과 무관한 곳에 있거나, 강변북로 인근 성수대교 위령탑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만들면 끝이라는 양 방치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화성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는 공통적으로 안전교육 관련 시설에 추모비를 세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과 동떨어진 장소 선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어려웠고, 재난 희생자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로 '안전 교육'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을 유지해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모 공간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1년에 한 번 추모식을 여는 장소 정도로 좁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4.16 생명안전공원은 안산 시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화랑유원지에 등지를 틀 예정이고,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추모위원회에서도 참사 20주기 만에 추모비 일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모 공간이 더 찾기 편한 곳으로 다가올 때 시민들은 재난이라는 역사와 맞닿기 위한 공공 공간을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간 지역사회 내 추모 공간

설립은 불길한 시설로 낙인 찍혀 피해자들을 한 번 더 고립시키곤 했습니다. 새로운 추모 공간에서는 달라진 기억의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온 재난 피해자의 싸움을 들여다봤습니다. 끊임없이 재난을 개인화하려는 힘에 맞선 피해자들의 싸움은 재난 이후의 사회를 바꿔왔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지금 현재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현재진행형인 재난 피해자들의 싸움을 조사하거나 토론하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다.

1. 조사하거나 토론해본 재난은 무엇인가요?

2. 해당 재난의 경우를 떠올리며 아래 항목들에 답해봅시다.

진실 재난의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이뤄졌나요?

정의 재난 책임자 처벌은 어디에서 멈췄나요?

안전 재난 이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나요?

회복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합당하고 적절했나요?

기억 재난 이후 추모 행사, 추모 공간 건립, 기록과 공유는 진행되고 있나요?

3. 해당 재난에서 '진실', '정의', '안전', '회복', '기억'은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나요? 진실을 통해 정의에 다다르거나, 혹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회복도 불가능하거나, 각각의 권리가 연결된 점을 찾아봅시다.

4. 해당 재난을 통해 어떤 사회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나요?

5. 이 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재난 피해자의 곁을 지킬 우리 모두를 위해



“아직도 안 끝났어?” 재난의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하나 속 시원히 이뤄진 것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면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하나 고민하다보면 말문이 막혀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야?” 핀잔 섞인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서운함,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무력함, 이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아득함에 절로 막막해집니다. 누군가는 재난을 마주한 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반면, 어떤 이들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고 의아해하며 아픔에 대한 공감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양 말했습니다. 재난을 잊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도’와 ‘언제까지’ 앞에서 때로 막막하고 무력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재난을 잊지 않은 사람들은 재난 이후 변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재난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재난 이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식,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사회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요. 피해자에게 재난은 내가 살면서 보고 배우고 믿어왔던 세상, 국가관,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고 뒤바뀌는 과정으로 끝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난을 속수 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반복되는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뼈아픈 각성이 사회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러한 발견 속에서 재난 피해자와 그 곁을 지켜온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재난 이후의 세상이 막막하고 아득할 때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이 변한 만큼 세상이 변했을 테고, 애도와 공감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듯 말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당신의 흔적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재난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느낀 많은 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꾸준히 재난 피해자들의 곁을 지켜온 사람들은 자신의 자신의 직장, 동네, 주로 맺는 관계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역할부터 하나씩 찾아나갔다고 말합니다. 자기 삶에서 꾸준히 접촉면을 만들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은 재난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위치에서 더욱 풍부한 결로 확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핸드북에서는 재난 피해자들이 만들어온 변화를 권리의 언어로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재난 피해자와 그 곁을 지켜온 사람들이 무수한 오해와 한계에 부딪치면서도 용기 있게 걸어온 흔적이었습니다. 재난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 피해자는 수동적인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라는 외침은 분명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바꿔왔습니다. 함께 만들어어나가고 싶은 세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재난을 잊지 않고 싶은 우리는 재난 피해자의 곁을 지키길 우리이기도 합니다. 재난을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려는 힘에 맞서 “잊지 않겠다”고 말해온 우리는 스스로 변하면서 이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재난이 남긴 흔적과 변화는 우리와 사회가 맺는 관계뿐 아니라 우리 서로가 맺는 관계도 바꿔왔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목격자에서 동료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함께 질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곁을 지키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헤아려볼 때, ‘아직도’와 ‘언제까지’에 대한 우리의 답을 찾아내는 길 위에 권리의 언어를 새겨보면 어떨까요. 재난 이후 진실, 정의, 안전, 회복, 기억의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깨달음은 이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실마리 삼아 걸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의 권리를 이루는 길 위에 서리라 믿습니다. ‘재난’과 ‘피해자’를 둘러싼 통념을 헤치고 나아가서 변화를 위한 싸움을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곁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함께, 우리 서로의 곁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면 좋을 책들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이 재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재난 피해자 권리에 관해 영감을 돋우는 책을 몇 권 추천해주었습니다.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이 낸 『금요일엔 돌아오렴』(2015), 『다시 봄이 올 거예요』(2016),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2019)도 함께 읽어보세요.



『내 꿈을 기억할게-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 투쟁 이야기』 이승원, 한내, 2013.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 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참사의 전 과정에 함께했던 이승원 씨가 기록한 책이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들이 누구와 어떻게 싸우며 문제를 정치화하고 연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노다 마사야키, 서혜영 옮김, 펜타그램, 2015.

재난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재난 유가족들에게 일상의 시간이 아닌 시간이 멈춘 '상(喪)의 시간'이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속지 않는 자들이 방향한다』 백상현, 위고, 2017.

세월호 유가족들의 투쟁을 공동체 균열에 대항하는 진리 출현 과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책이다. 어렵지만 쉽고, 얇지만 짙은 책.



『쇼크 독트린』 나오미 클라인, 김소희 옮김, 살림Biz, 2008.

자유시장이 어떻게 재난과 끔찍한 사건들을 이용해 공적기반을 파괴하고 시장과 신자유주의를 가속화 하는가를 탐구했다. '재난 자본주의'라는 신조어는 이 책을 통해 도래했다.



『이 폐허를 응시하라』 리베카 솔닛, 정해영 옮김, 펜타그램, 2012.

재난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보인 행동의 의미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며, '모이고, 행동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이들이 만든 이상적 공동체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재난 그 이후』 세리 핑크, 박중서 옮김, 알에이치코리아(RHK), 2015.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참사에 대한 탁월한 탐사 르포. 재난 관리 시스템이 붕괴한 사회에서 삶과 죽음이 결국 한 개인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만들어진 재앙'을 폭로한다.



『재난 불평등』 존 C 머터, 장상미 옮김, 동녘, 2016.

재난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재난 피해는 사회 구조와 격차, 기존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증폭됨을 실증적 사례로 제시한 책이다.



『재난을 묻다』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서해문집, 2017.

권력과 구조가 은폐한 재난 참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통해 반복되는 재난을 막기 위해 쓴 한국 사회 재난 연대기. 7개의 재난 참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죽은 자들의 웅성임』 이소마에 준이치, 장윤선 옮김, 글항아리, 2017.

고통에 온전히 가닿을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목소리가 되지 못한' 재난 피해자의 '웅성임'에 가닿을 수 있음을 일본 3.11 대재난을 통해 사유한다.



재난 피해자의 권리 목록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은 2019년 4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에서 제시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목록’을 소개합니다. 전체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집 링크

<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2593>



I. 살아나올 권리를 허하라

- 1) 내가 처한 상황을 알 권리
 - 2)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권리
 - 3) 살아나올 수 있도록 구조 받을 권리
- 보론 : 살아나올 권리를 위하여

II. 재난참사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권리

1. 생존자와 그 가족
 - 1) 몸과 마음을 추스를 권리
 - 2) 안정을 지킬 권리
2. 실종자와 그 가족
 - 1) 실종자 수색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
 - 2) 실종자를 기다리는 동안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
 - 3) 실종자 수색을 포기 당하지 않을 권리
3. 희생자와 그 가족
 - 1) 시신 인도 과정을 존중받을 권리
 - 2) 장례 절차를 포함해 추모와 애도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
4. 구조 및 지원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 1) 안전하게 일할 권리
 - 2) 다양한 피해를 인정받을 권리

III. 모이고 말할 권리

- 1) 눈치 보지 않고 말할 권리
- 2) 모임을 구성할 권리
- 3)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
- 4) 돈 때문이라고 의심받지 않을 권리
- 5) ‘피해자’답지 않을 권리

IV. 진실, 정의, 안전, 회복, 기억에 대한 권리

1. 진실에 대한 권리
 - 1) 의문과 질문을 멈추지 않을 권리
 - 2) 기록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
 - 3) 진상규명 절차와 제도에 참여할 권리
2. 정의에 대한 권리
 - 1)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 2) 책임 있는 사과를 받을 권리
 - 3) 정당한 배보상을 요구할 권리
3. 안전에 대한 권리
 - 1)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할 권리
4. 회복에 대한 권리
 - 1) 체계적이고 충분한 지원에 대한 권리
5. 기억에 대한 권리
 - 1) 사회적 기억과 추모에 대한 권리

부록 : 언론의 책무

- 1) 재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책무
- 2) 피해자의 안정을 침해하지 않을 책무
- 3)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을 책무
- 4) 피해자 비난의 확산을 막을 책무
- 5) 진상규명의 책임주체로 나설 책무
- 6) 재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할 책무

노란리본인권모임은

세월호참사를 인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나누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자원활동가 모임입니다. 2017년부터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 재난 진상조사의 과제, 재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함께 공부한 내용을 모아서 2019년 4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2019년 12월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를 발간합니다.

발행일 2019년 12월 1일

발행인 인권운동사랑방

전화 02-365-5363

팩스 02-365-5364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홈페이지 www.sarangbang.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0-549043 인권운동사랑방

주소 (07313)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7-13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이 핸드북은 ○▽△음 인권재단사람 의 <인권프로젝트-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